국감서 밑천 드러난 '김현지 주례' 낙하산

경제포커스

이인열
논설위원

얼마 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답변은 귀를 의심케 했다. 작년 매출을 묻자 "6조원 정도", 영업이익은 "3300억원"이라 답했다. 실제는 각각 3조9982억원, 5296억원이었다. 매출은 2조 부풀리고 이익은 2000억원 줄인 것이다. 취임 직후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재무 건전성'부터 따졌다는 하 사장이 정작 본인은 반년이 지나도록 얼마 벌어, 얼마 남기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지역난방공사는 2100여 직원을 두고 수도권 신도시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 에너지 공기업이다. 수많은 주주의 '돈'이 얽힌 코스피 상장 기업이기도 하다. 민간 상장사 대표가 이런 식이었다면 허위 공시와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을 것이다.

다른 답변도 기막히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약 계층 요금 지원이나 일자리 사업은 설명조차 못했다. 171억원을 쏟아부은 히트펌프 사업은 연평균 가동률이 30% 수준인데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지원 동기는 더 가관이다. "에너지 교육이 현실화되는 핵심 기관이라서"라고 답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그는 국가 기간 에너지망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오죽하면 의원이 "공부 좀 하고 오라"며 혀를 차고, 본인 스스로 "공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다"고 실토했겠는가.

선발 과정은 기가 찬다. 하 사장은 서류 심사 8명 중 8등, 면접 5명 중 5등이었다. 전형마다 꼴찌다. 그런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을 거쳐 연봉 2억4000여 만원짜리 사장에 올랐다. 그는 "초기 기준과 최종 선택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강변했다. 꼴찌를 1

취임 반년에 공기업 매출도 몰라
서류 꼴찌가 1등된 거 公正 맞나
곳곳서 심해지는 권력의 사유화
무능의 대가는 국민이 떠안아야

등으로 뒤바꿀 거라면 시험과 심사는 왜 치렀으며, 그 해괴한 '최종 기준'이란 권력의 낙점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는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정권 핵심 실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 주례를 선 인물이다.

이 장면에서 작년 연말 공공기관 업무 보고 생중계가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온 국민 앞에서 매섭게 몰아세웠다.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 사장에게 관세청과 수사기관이 전담하는 외환 밀반출 단속 책임을 물으며 면박을 주자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달러 뭉치 반출에 날카로운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백 번 양보해 업무를 꿰고 있어야 한다는 경고였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서슬 퍼런 잣대는 왜 측근의 주례를 선 '낙하산 꼴찌' 사장 앞에서는 멈춰 서는가. 전 정권 인사는 소관도 애매한 일로 공개 망신을 주고, '내 편'은 기본 수치조차 몰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게 공정인가.

권력 주변의 논공행상이 도를 넘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들의 금배지 행진에 이어 그들의 매형과 누나가 대통령 비서실장·총영사에 오르는 '신(新) 명문가'마저 등장했다. 에너지·환경·건설 등 기관 곳곳에 지자체 인연이나 선거 공신이라며 안착한 '경기·성남 라인'은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다.

공기업 낙하산은 정권마다 있어왔다. 이번에는 전문성은 고사하고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기본 업무도 모르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 요직을 맡기니, 인사 난맥을 넘어 '권력 사유화(私有化)'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서민의 난방비에 직결된 국가 인프라가 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무능의 대가는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온다. 입으로는 공정과 책임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리 나눠 먹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과거보다 낫다' 거나 '관행'이라는 변명은 결코 국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누구 말처럼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65]

편지 쓰고 싶은 가을, 筆匠의 붓

가을이 깊어지니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하지만, 자판에 익숙해진 탓인지 손글씨가 마음처럼 써지지도 않고 영 낯설기만 하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했는데, 괜스레 펜 탓만 하면서 필기구 욕심만 낸다.

옛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좋은 붓이라면 글씨도 잘 써질 것이라 기대했을 법하다. 그 좋은 붓의 조건을 첨제원건(尖齊圓健)이라 했다. 붓 끝이 뾰족하고 털끝은 가지런하며, 붓 촉이 원통형으로 둥글고 눌렀다 놓으면 탄력 있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선비들은 붓을 종이·먹·벼루와 함께 문방사우(文房四友)라 부르며 벗처럼 곁에 두었다.

이런 전통 붓을 만드는 장인을 필장(筆匠)이라 한다. 필공(筆工)이라고도 불린 이들은 우리 기록 문화와 서화의 발전을 뒷받침한 전문가였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붓을 만들었으며, '경국대전'에는 공조 소속 필장 8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붓 만드는 일은 털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된다. 붓은 동물의 털로 만드는 모필(毛筆)과 칡·억새 등으로 만드는 초필(草筆)이 있다. 재료에 따라 손질법도 달라, 모필은 털의 기름기를 빼고 한 올씩 고르며, 초필은 식물을 찌고 말리고 두드려 부드럽게 손질하여 가지런히 모아 붓을 맨다. 재료의 성질을 다스려 먹을 머금은 붓끝이 섬세하고 탄력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필장의 기술이다.

※영상 QR코드

유필무(66·사진) 필장의 붓 제작 시연을 본 적이 있다. 털을 고르고 다듬는 유려한 손놀림과 사각거리는 작업 소리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좋은 붓 한 자루를 갖고 싶어졌다.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붓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봐야겠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

社 說

대법원장 '탄핵 거리' 찾으려 국정조사 한다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음 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런 만큼 대법원장에게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28일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100% 같은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정조사보다는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조금 더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결과와 이후 여론을 보면서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강경파 주장대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 마비 등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유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계엄 당일 간부회의 내용,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 환송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도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을 트집 잡기 위한 국정조사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집권 세력이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정조사를 해 보고 여기서 탄핵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정조사의 정당성이 없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자기만 선명한 개혁인 양 선동하고 실질적 개혁을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을 길들이겠다고 탄핵을 들먹이고 국정조사로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개혁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대해 국민 절반(50.3%)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은 32%였다. 국민은 반대하는데 강경 지지층 눈치 보느라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시늉하고, 아무리 봐도 탄핵할 근거가 없으니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찾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나.

너무 길고 '트집 잡기'식, 원전 연장 심사 대폭 간소화해야

설계 수명이 지나 가동을 멈춘 고리 원전 3·4호기의 운영 기간이 10년 연장됐다. 두 원전은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대형 원전 2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리 3·4호기에 이어 다음 달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3·4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원전은 가동 연한이 있지만 이는 설계상 잠정적 수치일 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연장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이번 기회에 설계 수명에 이른 원전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부터 재가동까지 길게는 3~4년이나 걸리는 등 불합리한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고리 3·4호기는 재가동 시점부터 수명이 10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수명 만료 시점부터 10년이 늘어나는 구조다. 심사 기간과 재가동 준비까지 감안하면 7~8년 더 가동할 수 있을 뿐이다. 최소한 재가동 시점부터 10년 수명 연장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처럼 20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원전을 더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원전을 안전하면서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가동 중인 90여 기 원전 중 80여 기에 60년 운전 연장을 승인했고 일부는 80년 연장 승인까지 받았다. 최근엔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60년,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60년 플러스 알파'로 원전 운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했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전제로 60~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다. 우리처럼 원전을 40년 쓰고 조기 폐쇄하거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연장에 시간을 끌면서 온갖 애를 먹이는 나라는 없다.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멀쩡한 원전을 몇 년씩 세워 놓고 트집 잡기식 계속 운전 심사를 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앤스로픽 창업주에 '황금주', 신뢰 받는 혁신 기업이 부럽다

상장을 추진하는 AI 업체 앤스로픽이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공동 창업자 7인에게 황금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자(founder)의 약자인 'F주'로 이름 붙인 이 주식은 단 1주지만 50.1%의 의결권을 갖는다. 미국 증시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이다. 7명 합계 지분율이 10%에 불과한 창업자들은 상장 후 지분율이 낮아져도 황금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미국에서 이런 특혜가 가능한 것은 회사법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정관을 개정해 의결권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구글·메타·에어비앤비 같은 IT 기업뿐 아니라 포드처럼 역사가 오랜 기업도 복수 의결권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이 엄격하다. 3년 전 비상장 벤처에 한해 복수 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상장 3년 뒤엔 보통주처럼 1주 1표로 바뀌는 시한부 권리다. 창업자가 장기 비전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소액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대주주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뚫지 못했다. 과거 재벌 대기업들이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 주주 권리를 침해한 전력이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도 창업자 마음대로 황금주나 복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이사회 의결과 주주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 상장 기업 중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 곳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앤스로픽도 아마존·구글 등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황금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사회와 주주가 동의한 것은 창업자가 계속 경영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창업자인 머스크에게 각각 2억주, 1조달러의 대규모 보상안을 승인한 것도 그를 붙잡아두기 위해서다.

앤스로픽과 스페이스X의 교훈은 경영권 보호가 제도보다 기업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아모데이나 머스크처럼 압도적인 비전과 성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혁신적 기업가가 많아지면 경영권을 지켜주자는 주장은 주주와 국민이 먼저 하게 될 것이다.

《룰라의 브라질》이 보여준 사법부 정치화의 민낯

룰라 변호인 출신 대법관이 투표시간 연장 … 호남은 연창하고 영남은 총효한 셈

newdaily.co.kr 뉴데일리

권력의 시녀가 된 브라질 대법원
《룰라의 변호사》가 《룰라의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가 법무장관?

선거판 뒤흔든 대법관의 결정

지난 25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좌파의 ***룰라*** 대통령이 우파의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을 꺾고 4선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은 선거 막판에 벌어진 기이한 사건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투표 종료 직전, 브라질 연방 대법원(STF)의 대법관 한 명이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도록 명령했다. 오후 5시 종료 예정이던 투표를 오후 7시까지 연장하라는 결정. 문제는 결정이 내려진 시각. 투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 절차까지 시작한 상태였다.

그 결정을 내린 대법관의 정체는 ***크리스티아누 자닌 (Cristiano Zanin).*** 바로 ***룰라***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 선거 당사자의 변호인 출신 대법관이 투표시간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이는 지난 6월 3일 벌어졌던 **《잠실 투표용지 부족》**을 떠올리게 한다. 브라질에서의 원인은 달랐다. 브라질은 전자 투표기를 사용한다. 문제가 된 것은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라 교통 문제와 기상악화였다. ***룰라*** 측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운행을 줄여 투표를 방해했다며, 투표 연장을 요구했다. **보우소나루** 측 역시 폭우와 침수를 들어 일부 지역의 투표 연장을 요구했다.

▲ 김민전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틀려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의해 제지된 PPT 자료 화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관직 장악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런 자료조차 입틀막하는 게 이재명 정권의 행태다. ⓒ 화면 갈무리

선거 관장 최고 선거재판소(TSE)가 결정을 미루자, ***룰라***는 연방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구했다. 그 사건이 ***자닌***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왜, 하필 ***자닌?***

연방 대법관이 내린 선택은 중대한 질문을 남긴다. ① 연방 대법관 한 명이 선거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 ② 더욱이 그 대법관이 하필이면 현직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출신이라면?

자닌의 결정은 혼란을 불러왔다. 투표를 종료한 투표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자 투표기를 다시 작동시킬 수 없다. ***자닌***과 선거 법원은 투표가 계속되고 있던 곳에 한 해 투표를 연장하도록 했다. 어떤 투표소는 오후 5시, 다른 투표소는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 정치에 비유해 보자. 호남에선 투표를 계속했지만, 영남에선 추가 투표가 불가능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선거 유불리와 상관없이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자닌***의 결정은 공정했는가?

룰라의 브라질판 신종 매관매직

가장 민감한 대목은 ***자닌***과 ***룰라*** 사이의 관계다. 자닌은 2013년부터 ***룰라*** 가족의 고문 변호사다. 대규모 부패 수사 《라바 자투》(Lava Jato·세차작전) 과정에서 ***룰라***의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룰라는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지만, 2021년 연방대법원은 돌연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 ***자닌***은 1등 공신이었다. 2022년, ***룰라***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됐다. 2023년, ***룰라***는 ***자닌***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고, 다시 그 대통령이 출마한 선거에서 절차 변경을 명령하는 것이 말이 되나?

남미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다.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이른바 똘마니들을 줄줄이 임명했다.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권력의 법적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창녀로 전락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법관 인사의 정치화, 대통령과 법관의 사적 관계, 사법기관의 정치적 재판이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그 끝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부하로 타락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민주당 의총 결정)는 그 1막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서곡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생겼다.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무장관?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대통령 변호인들의 관직 발탁이다. 야당에선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서 매관매직**이라고 지적한다. ***조원철***(법제처장) ***이찬진***(금융감독원장) ***김희수***(국정원 기조실장) ***차지훈***(주유엔대사) ***김성식***(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승철***(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이태형***(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민정비서관) ***이장형***(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승엽*** 변호사는 누나(***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와 매형(***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직을 꿰찼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무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재판 대응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박균택*** 의원은 사건 변호인으로 직접 활동했다.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관장하는게 옳은 일인가. 브라질의 ***자닌***을 떠올리게 된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독립된 사법부에 달려 있다. 브라질 대선이 한국에 던진 경고다. 남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진광 사장 / 편집인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10월 27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21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